

# 현안과 과제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와 시사점  
- 지역 금융안전망 보강해야

## Executive Summary

### □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와 시사점 - 지역 금융안전망 보강해야

#### 1. 프랑스 G20 정상회의 개요

(의미) 제 6차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세계경제 후퇴 방지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을 주요의제로 2011년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프랑스 G8 정상회의가 아랍의 민주화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주요의제)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고 유럽 재정위기 해결사로 부상한 중국 등 신흥국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자본참여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더불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 간 장단기 정책공조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본이동 관리 원칙과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G-SIFIs(글로벌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규제안에도 공동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원자재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될 것이다.

#### 2.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

그러나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환율전쟁도 재점화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소폭 축소되었던 G20 국가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은 신흥국으로의 외환 보유액과 자본유입을 증가시켜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제통화제도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것이다.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IMF재원 확충을 주장하였다. 이는 2010년 서울회의에서 IMF 쿼터 중 6%가 신흥국으로 이전된 것과 함께 국제통화제도 하에서 신흥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기존 선진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셋째, G20내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어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유로존 해법 도출에 있어 미국,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개입을 둘러싼 대립,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는 IMF 재정 확충과 신흥국 자본통제를 둘러싼 의견 상충, 그리고 신흥국 간에도 주요의제에 대한 중견국과 신흥국들의 협력이 미약하다.

### 3.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시사점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안 도출과 한계를 바탕으로 차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지역금융안전망의 보장이 필요하다. G20하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 심화되면서 역내 위기 차단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체계인 EFSF(유럽), CMIM(아시아), FLAR(남미) 등이 강화되고 있고 개별 국가 간 통화스왑 체결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IMF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M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위기 경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며 이미 종료된 한-미 통화스왑의 재체결도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 재확립 과정에서 한국 등 중견국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다. G20내 중견국가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가 G20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0년 11.9%로 높아졌고 2015년 12.8%로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G20 회원국 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어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낼 중재자로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G20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규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유럽연합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본시장 변동성이 높은 신흥국들도 공동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전망된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되는 BaselⅢ 영향 등으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은 자본을 확충(기본자본비율(Tier1) 4%—6%)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아직 낮은 만큼 G20 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안의 국내 적용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면, 자본 유출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개요

- (의미) 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유로존 재정위기, 세계경제 후퇴 방지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 향후 세계 경제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지난 5월 25~26일 프랑스 도빌(Deauville)에서 개최되었던 G8<sup>1)</sup> 정상회의가 아랍의 민주화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하면서 우선 관심 대상이었던 거시경제 정책 조정 문제는 G20 회의로 넘어감
  -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12개의 주요 신흥국들<sup>2)</sup>을 더한 20개국으로 구성
- 이에 따라 2011년 11월 3~4일 프랑스 칸(Cannes)에서 열리는 제 6차 프랑스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 역할을 부여받음
  -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5차 서울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협력과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발표

### < G20 정상회의의 경과 >

일 시	장 소	주요의제
1차(2008.11)	미국 워싱턴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과 해소 방안 공조
2차(2009.4)	영국 런던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
3차(2009.9)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연례화, 국제금융규제 개혁 외
4차(2010.6)	캐나다 토론토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외
5차(2010.11)	한국 서울	-거시경제정책 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이슈
6차(2011.11)	프랑스 칸	-유럽 재정위기 해소, 글로벌 정책공조 및 IMF 개혁 외

1) G8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로 구성됨.  
 2) 12개 주요 신흥국들은 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에서 터키, 러시아,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오세아니아의 호주로 구성됨.

○ (주요의제) 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핵심의제로 다음의 주요 5대 의제에 관한 논의가 예상된다

- (의제1)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원 : 지난 10월 27일 유럽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가 표명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EFSF 자본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 (의제2) 거시경제정책 공조 :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추진, 신흥국은 인플레이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기 복원력을 높이는 거시정책 수행에 합의 예상
- (의제3)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자본이동 관리원칙과 채권시장 발전방안, 위기 전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 방안 등 마련
- (의제4) 글로벌 금융기관 규제 : 글로벌 중요 금융기관(G-SIFIs)의 부실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의제5)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 실물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선, 감독 방향의 구체화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의 제	주요내용
거시경제정책 공조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에 지지 표명하고 신흥국의 EFSF 자본 참여 가능성 타진 -장단기 정책공조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진국 재정건전화 추진, 신흥국 내수 확대 및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및 유연성 강화 노력
국제통화제도 개혁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채권시장 발전 방안에 합의 -IMF 자원 확충 방안 논의
금융규제 개혁	-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 정책체계와 D-SIFIs(Domestic-)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실물 및 파생상품시장 개선작업과 규제 방안 마련 ·국제석유통계 및 국제가스통계 구축 ·IOSCO에서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을 규제·감독
개발 및 기후변화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자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

자료: 프랑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커뮤니케, 2011.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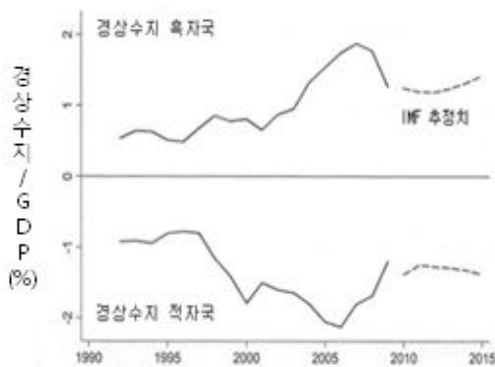
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점검하는 기구

## 2.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

### ○ (글로벌 불균형 재확대) 지난 서울회의에서 합의되었던 개별 회원국의 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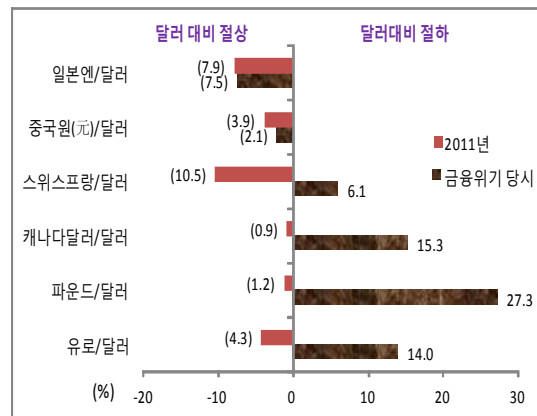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서울회의에서 합의했고 이번 프랑스 회의에서 도입하기로 추진했던 예시적 가이드라인<sup>3)</sup>이 지난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커뮤니케에서 제외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G20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정책공조와 불균형 축소 노력으로 2009년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불균형 지속은 환율전쟁의 재점화 요인임
  - 글로벌 불균형 지속은 신흥국의 외환보유액과 자본 유입을 계속 늘어나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현상을 심화될 것임
  - 최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일본 엔, 스위스 프랑의 변동성도 지난 금융위기 당시보다 전년말대비 2011년 9월 절상폭이 7.9%, 10.5% 더 높았고 이들의 외환시장 개입도 빈번

<G20의 경상수지 불균형 추이>



자료: 피터슨 경제연구소, "Current account imbalances coming back", 2010.10.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변동성>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금융위기 당시는 2009년 5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이며, 2011년은 9월 기준 전년말대비. ( )는 마이너스.

3) 예시적 가이드라인이란, 2010년 5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대외불균형을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11년 11월 프랑스 회의때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국가의 재정지표, 무역지표, 환율·통화지표를 통해 불균형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었음.

○ (국제통화제도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대립 심화) IMF 자원 증액을 통한 신흥국의 입지 강화 움직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

-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IMF 자원 확충을 주장하였으나 자신들의 입지 축소를 우려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기존 선진국들은 반대
  -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은 유럽 부채위기 해결과 글로벌 위기의 심화로 IMF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는 2010년 서울 회의에서 IMF 지분 조정에 이어 자원 참여 확대로 신흥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음
  - 미 재무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비 유로존 국가들도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이 해결할 문제로 규정
  - IMF의 자원은 2,500억 달러에서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5,000억 달러를 증액하여 총 자원규모를 7,50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 쿼터 중 6%<sup>4)</sup>가 신흥국으로 이전

<G20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일 시	내 용
런던회의 (2009.4)	-IMF 자원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증액
서울회의 (2010.11)	-IMF 쿼터 중 6%를 신흥국으로 이전 ·탄력대출제도, 예방대출제도 등 도입
칸회의 (2011.11 예정)	-IMF 단기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IMF 자원 추가 확대 방안 논의

자료: IMF.

<IMF 쿼터와 투표권 현황>

	쿼터(Quota)		투표권(Vote)	
	백만 SDR	비중 (%)	투표수	비중 (%)
미 국	42,122.4	17.72	421,964	16.77
일 본	15,628.5	6.57	157,025	6.24
독 일	14,565.5	6.13	146,395	5.82
프랑스	10,738.5	4.52	108,125	4.30
영 국	10,738.5	4.52	108,125	4.30
중 국	9,525.9	4.01	95,999	3.82
한 국	3,366.4	1.42	34,404	1.37
그 외	126,618.9	55.72	1,317,309	55.88

자료: IMF.

주: 2011년 9월 기준임.

4) 2010년 서울 G20 회의의 합의에 따라 선진국의 IMF 쿼터 6% 이상은 신흥국으로 이전되었고, 또한 급격한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하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가 신설되었음.

\* 탄력대출제도란, 튼튼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에게 IMF의 SDR 인출기한 연장 및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제도

\*\* 예방대출제도란,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 건전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국가들에게 예방적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부여

○ (G20내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 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문제에 대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 구도가 심화될 수 있음

-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신흥국, 신흥국과 신흥국 간 대립 심화
  - 선진국 간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도출에 미온적이고 이를 유럽 문제로 한정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
  - IMF 재정 확충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의견 대립과 신흥국 금융안전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있어 선진국들의 지원이 미미
  - 한편, 신흥국 사이에서도 BRICS 국가와 한국 등 그 외 중견국가들 간의 협력력이 미약하고 중견국가의 위상 문제가 제기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

	한 계
글로벌불균형 재확산	-예시적 가이드라인 도입 무산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은 환율전쟁의 재점화 요인임
국제통화제도를 둘러싼 대립 심화	-신흥국의 IMF 자원 확충에 대해 선진국이 강하게 반대
G20내 대립 구도 심화	-선진국 VS 신흥국 등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구도 표면화 -중국의 EFSF자본 참여 등 유럽위기 해결 방안 도출에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3.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시사점

○(지역 금융안전망의 보강)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안전망 확충으로 역내 위기차단의 필요성이 높아짐

- 글로벌 위기의 반복·심화로 역내 국가들 간 지역 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자본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고 ECB의 역할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 유럽 역내 금융안전망의 역할이 확대
  - CMIM(치앙마이 다자화 협정<sup>5)</sup>)은 총 규모 1200억 달러, ASEAN+3가 참여하고

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로서 통화스왑 방식에 합의하



-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이나 위기시 단기 유동성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발효됨
- FLAR(라틴아메리카 기금)은 1978년 창설되어 44억 달러, 남미 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최근 브라질 등이 참여하여 기금규모를 확대할 계획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도 재확산
  - 2011년 10월 들어 한국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중국과도 26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확대
- 따라서 우리나라도 IMF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M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차원의 위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CMIM 내에 역내 경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설립된 AMRO(역내경제감시기구)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역내 국가의 경제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할 것임
  - 또한, 2010년 1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왑도 재체결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

**<지역 금융안전망 현황>**

형태	기관
EFSF	-2010년 5월, 4400억유로 비상기금 -유로존 재정위기국 지원
CMIM	-2010년 3월 공식발효 -1200억 달러, ASEAN+3 참여 -다자간 스왑체결체제
FLAR	-1978년 창설, 44억 달러 기금 -볼리비아, 콜롬비아 외 남미개국 참여 -재정난을 겪는 회원국 지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 >**

국가	규모 (억 달러)	내용
한-미		-2008년 10월 300억 달러 체결, 2010년 1월 만기
한-중	560	-기 260억 달러에서 2011년 10월 300억 달러로 확대
한-일	700	-기 130억 달러에서 2011년 10월 700억 달러로 확대
CMIM	192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192억 인출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중견국가 리더십 발휘)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확립 과정에서 조정하고 중재할 중견국가 5개국(5 Middle Powers; M5)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함**

- G20내 중견국가는 한국,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2012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로 구성되며, 중견 5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음

면서 2000년 시작되었고, 이후 다자 지원협의체로 발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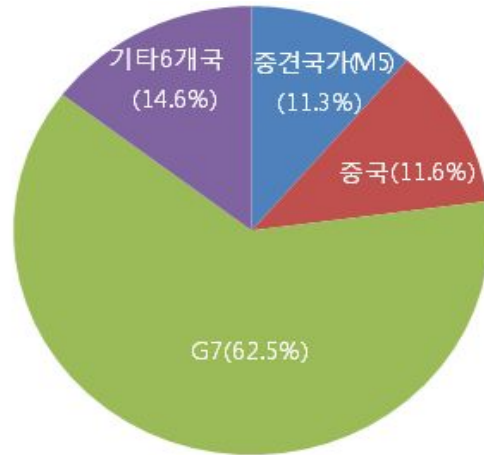
- 이들 중견국가가 G20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5개국 GDP/ G20국가의 GDP)는 2000년 9.1%에서 2010년 11.9%로 높아졌고, IMF에 따르면 2015년에는 12.8%에 달할 전망이다
- 회원국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낼 중재자로서의 중견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최근 G8은 추가 회원국 확보를 통한 확대 가능성을 브릭스 국가들도 공동 입장을 견지하면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음
  - 지난 서울 회의는 선진국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G20회의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환율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개발이슈를 선도하면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합의안을 도출해냄
- 우리의 의견을 합의안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함
  - G20내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의제 개발 등에 적극 참여
  - 한편, G20 내에서 중견국가인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비공식 코커스(Informal Caucus)를 발전시킴

<중견국(M5)의 경제지표(2011년)>

	GDP 성장률 (%)	1인당 국민소득 (달러)	인구 (백만명)	재정 적자 (%GDP)
한국	3.9	23,749	48.6	4.1
호주	1.8	66,984	21.9	4.2
브라질	3.8	12,917	195.0	3.5
남아프리카공화국	3.4	8,342	48.3	7.6
멕시코	3.8	10,803	107.8	2.3

자료: IMF.  
주: 전망치. 인구와 재정적자는 2009년 기준.

<G20 내 경제규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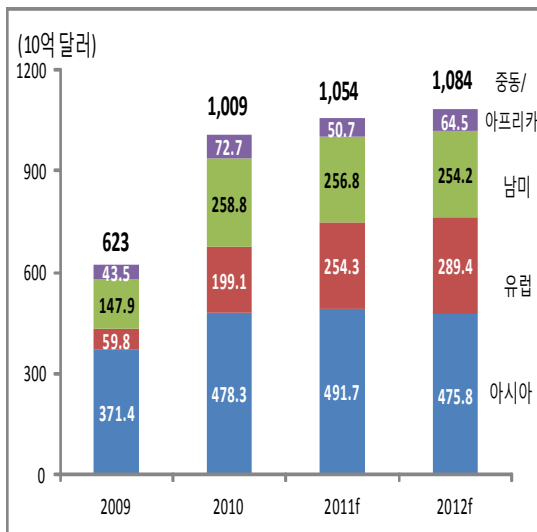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0년 기준임.

- (금융규제 강화 시대에 대비) 금융거래세의 도입 논의 확대, Basel III 도입 등으로 국내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새로운 금융규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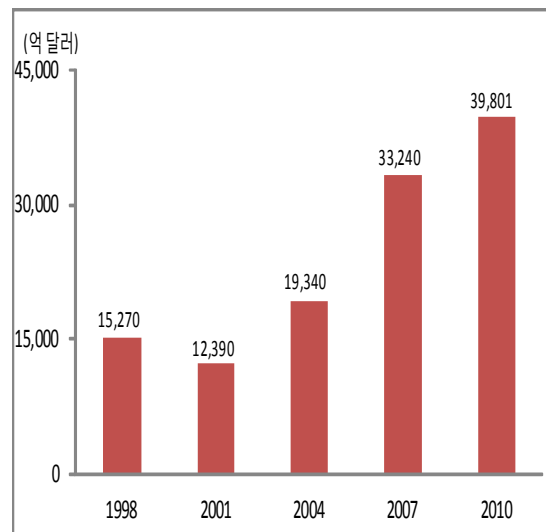
- 유로존 등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
  - 독일, 프랑스가 유럽연합 차원의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럽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sup>6)</sup>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신흥국의 민간투자자금 유입 규모는 2009년 6,230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540억 달러로 증가되고 세계 일평균 외환거래량도 1998년 1조 5270억 달러에서 2010년 3조 9801억 달러로 늘어나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자본 거래규모가 축소될 것임
- BaselIII 도입으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늘어나고 규제도 강화
  - 2010년 12월 확정된 BaselIII는 자기자본비율 8%는 BaselII와 동일하나 보통주 자본 비율을 2%에서 4.5%로 최소 기본자본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
  -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타은행 발행 은행채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A+' 등급 이상의 국고채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 자본 유출입 확대에 의해 자본시장 변동성이 높은 신흥국들도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신흥국 민간투자자금 흐름 추이>



자료: IIF(국제금융연합회).  
주: 2011년과 2012년은 추정치임.

<세계 외환거래량 추이>



자료:국제결제은행  
주: 4월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량 기준임.

경제연구본부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6) 유럽에서 추진중인 금융거래세(토빈세)는 금융회사끼리의 주식·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거래를 줄이고, 세수(稅收)는 늘리겠다는 계획임.

7) 2011년 10월 30일 파이낸셜 타임즈.

<별첨. 각 회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및 성과>

장소 및 일시	의제 및 성과	
미국 워싱턴 2008.11	의제	-국제금융위기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하고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과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마련
	성과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통 원칙 확인 ①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금융감독·규제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적 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 -거시정책공조 원칙 선언 -보호주의 장벽 설치 금지 선언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 과제 합의
영국 런던 2009.4	의제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및 보호주의 저지 방안 마련
	성과	-세계 성장과 고용 회복 ·2010년 말까지 재정 지출 5조 달러, 4% 성장 노력 등 -금융 감시 및 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강화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 무역·투자 증진 ·2010년까지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동결 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가에 500억 달러 제공 등
미국 피츠버그 2009.9	의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세계경제 및 성장에 관련된 이슈 및 무역 / 기후변화 자원조성 / 에너지 안보
	성과	-G20 정상회의 연례화 및 국제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합의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진 경우, 국제공조 아래 실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합의 -국제금융규제 개혁
캐나다 토론토 2010.6	의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 구축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
	성과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유사 국가그룹별 정책대안 마련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을 서울 정상회의시 마무리하기로 합의 -재무장관들에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국내, 역내, 국제적 수준의 정책대안 마련 지시 -서울 정상회의시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마련기로 합의
한국 서울 2010.11	의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이슈 외
	성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금융부문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